

전남 10개 시군, 2차 교육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다'

지방시대위·교육부, 공모 결과

특별교부금·맞춤형 규제 특례 전남형모델 발굴 행정집중 성과 '예비지역 추가 지정 노력 협력'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에 순천과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전남도내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30일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도내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차 공모에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으로 21개 시군이,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는 전남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특구 1차 시범지역 7개시군(목포·나주·광양·강진·영암·무안·신안) 선정에 이어 이번 2차 시범지역에 10개 시군이 지정됨에 따라 광역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다 지역 선정지가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 성과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지역 지정(2024년~2026년)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전남도는 유아부터 취업까지 아우르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전남형

미래학교, 지역특화 직업계고, 지역인재 정주 생태계 조성 등 15개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여수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과 마이스관광을 활용한 신에너지·마이스관광 특화 인재 양성에

나선다. 담양·곡성·구례는 K-푸드산업 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음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화순·함평·영광·장성은 인재유치 교육 특화형으로 자율형공립고, 직업계고 교육을 강화한다.

화순은 백신·바이오, 함평은 스포츠·재활, 영광은 이모빌리티·에너지, 장성은 문무(文武) 인재를, 해남은 1차 시범지역인 목포·무안·신안과 연계해 해양신재생에너지 특화인재를 양성한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2차 시범지역 시군과 협력해 각 시군 여건에 적합한 특구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청신호가 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10개 시군이 선정돼 매우 기쁘다. 함께 뛰어준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을 비롯해 성실히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남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진도에 대해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정 노력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정진욱 "산업부 '신규발전 허가 보류' 철회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지난 29일 "전력자립률 8.4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지역에 오는 9월부터 7년4개월동안 신규발전사업 허가 보류를 추진하는 산업부(한전)는 지역 차별 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부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지역별 고려 없이 광주에 있는 17개 변전소 모두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 12월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했다"며 "광주지역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씨를 말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광주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산업부의 지역차별적 조치로 인해 발전사업 제한에 따른 발전사업 희망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 정책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는 광주지역의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전의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 사업을 광주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안 장관에게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0일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특위의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의원,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년,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개월씩 연장했다.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도 신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 역동적 성장 의지"

내달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발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밝혔다.

금투세 폐지 및 주주환원 유도 인센티브 도입 계획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같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특사를 체코 현지에 보내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9월 중 체코 순방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창설 예정인 군 '전략

사령부'에 대해선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하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전략사령부령안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대통령실 제2부속실 검토에 "김건희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지원할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검토해야 할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의 설치를 결정하고 제2부속실장

까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한다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초유 배달의 검사 출장 조사 등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 시점에 허울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벽'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은 더욱 쌓이고 있다"며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한 지금 제2부속실의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